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56호 2023. 6. 30. (금)

공 포

조례 제161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조례 제16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4
조례 제1619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조례 제1620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조례 제1621호	부산광역시 북구 현철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조례 제162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조례 제162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14
규칙 제9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8

공										
람										

공 포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반환금액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7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7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17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제·개정(폐지) 이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제2호나목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현행 조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소비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별표4] 제1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금액 내용을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 사용료 전액**으로 변경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 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을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북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제3조~제4조)
- 다. 사업 및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5조~제6조)
- 라. 실태조사 및 창작공간 지원 (제7조~제8조)
- 마. 후원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제9조~제10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9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의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기준’반영(제2조)

- 조례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 한다’로 변경

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반영(제3조의2제2항)

- 조례 제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삭제하고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로 변경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범위 추가’에 따른 조례 반영(제3조제1호, 제3조의2제1항)

- 조례 제3조제1호부터 7호까지 및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의사항’으로 변경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제10조(우선조치) 삭제

마.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명시(제3조제3호)

- ‘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추가

공 포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20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시설물(제26조제2항제3호 관련)

1. 도시구조물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 로 시설물	가.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보도육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나. 폭 6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보도 다. 폭 6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석축, 옹벽, 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차도 경계석(볼라드 포함) 및 헨스 라.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도로부속 시설물	가. 20주 이상의 가로등주, 배전함, 맨홀덮개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2. 가로시설물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가로녹지시설	가. 20조 이상의 가로수 보호덮개 나. 길이 50m 이상의 가로 녹지대 (중앙분리용 녹지, 가로화분 포함) 다.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교통관련시설	가. 안내표지판 (도로명판, 방향유도판, 관광표지판 및 안내도 포함) 단,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제외한다. 나. 택사·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대기시설 다.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 라.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편의시설	가. 20개 이상 설치하는 벤치, 의자 나. 파고라 다. 20개 이상 설치하는 휴지통 라.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고정형 행정 광고물 나. 동상,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다. 벽화, 슈퍼 그래픽 라.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3. 도시공간시설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 시 환 경	가. 공원(쌈지공원 포함), 광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분수대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비고: 위 각 호의 시설물은 재해복구 등 긴급성이 요구되거나, 기심의 또는 기자문을 받은 원시설물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보수할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개정(폐지) 이유

[별표 6] ‘가로시설물’ 예외 대상 추가 및 자문 예외 사유 추가로 원활한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조례의 자문대상을 조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 6] ‘가로시설물’ 교통관련 시설 중 도로명판 예외사유 신설

- ‘단,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제외한다.’ 추가

나. [별표 6] ‘비고’ 자문 예외 사유 신설

- ‘위 각 호의 시설물은 재해복구 등 긴급성이 요구되거나, 기심의 또는 기자문을 받은 원시설물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보수할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추가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21호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을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혈자의 날”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매년 6월 14일을 말한다.
5. “헌혈 주간”이란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매년 6월 중 특정 주간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헌혈권장 등) 구청장은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혈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구민의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주간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혈액자원 확보와 혈액수급 안정화를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신설 (제2조)
- 나. 헌혈권장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3조의2)
- 다. 헌혈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제2항제3호)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2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3조”를 “제2조, 제3조 및 제6조”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을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 중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의정활동비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 받고 있어 국회의원과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만들어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 등 신설(제7조제2항, 제3항)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2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원, 파견공무원 등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자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의장은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2.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의 법률 지원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②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의회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실태조사 실시)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1(징계기준)의 비위의 유형에 8. “갑질 행위”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8. 갑질 행위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제·개정(폐지) 이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 ~ 제2조)
- 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 대책수립 규정(제4조 ~ 제5조)
- 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제6조)
- 라. 갑질 피해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제7조 ~ 제9조)
- 마. 갑질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처분 근거 규정(제10조)
- 바.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신고협조자에 대한 보호 규정(제11조 ~ 제12조)
- 사. 실태 조사 실시 및 직장교육 의무화 규정(제13조 ~ 제14조)

공 포

●부산광역시북구규칙제9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 6.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계	871	572	24	63	212
정무직	1	1			
일반직계	866	568	23	63	212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4	1	1	
행정	3	2	1		
기술	2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43	24	1	5	13
행정	16	12	1		3
시설	3	3			
의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시설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사서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약무·보건·간호	1			1	
6급 소계	213	170	6	10	27
행정	115	94	6	2	13
세무	15	15			
시설	10	10			
전산	1	1			
녹지	1	1			
간호	1			1	
사회복지	22	18			4
사서	3	3			
공업	2	2			
행정·사회복지	17	7			10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	2	2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2	2			
행정·시설	4	4			
행정·간호	1			1	
행정·방재안전	1	1			
환경·공업	1	1			
약무·보건	1			1	
보건·식품위생	1	1			
약무·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1	
운전	2	2			
기계운영	1	1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259	168	11	18	62
행정	108	70	8	4	26
세무	14	14			
사회복지	70	35			35
시설	17	17			
전산	3	3			
공업	9	9			
녹지	3	3			
간호	8			8	
보건	4	2		2	
의료기술	3			3	
환경	2	2			
방송통신	3	2	1		
사서	3	3			
해양수산	1	1			
식품위생	1	1			
숙기	1		1		
수의·농업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운전	3	2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8급 소계	247	148(2)	4	22	73
행정	85	58(2)	3	2	22
세무	12	12			
사회복지	56	19			37
시설	18	18			
전산	5	5			
공업	6	6			
녹지	3	3			
간호	22			11	11
보건	7	3		4	
의료기술	2			2	
환경	3	3			
사서	5	5			
방송통신	2	2			
숙기	1		1		
방재안전	2	2			
보건·식품위생	2	2			
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환경	1	1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행정·녹지	1	1			
사회복지·간호	1			1	
운전	4	4			
위생	1			1	
전기운영	2	2			
보건운영	1			1	
9급 소계	97	53(5)	-	7	37
행정	48	26(5)			22
세무	1	1			
사회복지	15	-			15
시설	10	10			
공업	2	2			
녹지	1	1			
의료기술	3			3	
환경	1	1			
사서	7	7			
보건	2			2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운전	5	3		2	
별정직 계	4	3	1		
5급상당 소계	2	1	1		
비서실장	1	1			
행정·별정 (구의회 전문위원)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 제·개정(폐지) 이유

산림휴양·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하며, 통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제2조 관련 별표)

- 총 정원 : 871명 → 871명(변동 없음)
 - 일반직계 : 866명 → 866명(변동 없음)
 - 8급 소계 : 247명 → 247명(변동 없음)
 - ▷ 본 청 : 148명 → 148명(변동 없음)
 - 행정 : 59명 → 58명(감 1명)
 - 행정·녹지 : 0명 → 1명(증 1명)